

# 비문·호남의원들 ‘제3지대 원샷 통합 경선론’

### “내년 대선 야당후보 역동적 경선 만들어야 표 결집”

#### 문재인·안철수 견제심리 반영...실현 가능성도 미지수

야권 일각의 정권 창출 방안인 ‘제3지대 원 샷 통합 경선론’이 조기에 부상하면서 오히려 동력을 잃고 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인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비주류 의원들의 세력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시기와 세력’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권의 ‘제3지대 통합 경선론’은 국정감사 이후에나 다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새누리당 대선 주자 합류 여부는 야권의 제3지대 경선론을 결정짓는 절대 조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백재현, 강창일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은 이날 ‘제3지대 통합 경선론’과

관련, 오찬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이날 모임이 미리 알려지면서 더민주의 김진표, 박병석 의원 등이 불참, 회동의 무게감이 떨어졌고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주승용 의원은 “친분이 있었던 더민주 의원들과의 차기 대선 등과 관련,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오찬 성격이었다”며 “이날 통합의 ‘통’자도 제3지대의 ‘3’자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날 모임이 알려지면서 별다른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감사 이후에나 제3지대 경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비주류 의원들 중

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3지대 원 샷 통합 경선론’은 두 당의 외부에 제3지대를 형성한 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모여 경선을 치르자는 논리다. 야권이 단순히 힘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 공정하고 역동성 있는 경선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표심 결집이 가능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양당 내에서 고착화 조짐을 보이는 대세론에 안주하기는 대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기저에 깔려있다. 특히 더민주에서는 비문(비문재인) 증진들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은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안 견제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장,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물론 안 전 대표 측 역시 이런 주장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제3지대론은 정당의 현실에서 지극히 이상적이고

정치공학적 접근”이라며 “시기도 아직 이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국민의당이 집권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박지현 원내대표도 “제3지대론에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당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구도로는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 창출이 쉽지 않다는 공감대도 높아 야권의 ‘제3지대론’은 언제든 다시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 내부에 분열로는 정권창출이 쉽지 않다는 공감대는 크다”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에 귀국, 새누리당 대선 주자로 움직인다면 이에 맞서 야권의 제3지대 경선론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진해운 대처 한목소리 질타 법인세율 정상화 놓고 대립각

###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

국회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흘째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진해운 사태 해결 방안과 야권이 요구하는 법인세율 인상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한진해운 사태=야야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면서도 새누리당은 야권의 정치공세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경영진과 대기업 정규직,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저성장이 아닌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을 늘리고, 무엇보다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을 옥죄면 기업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더민주 ‘경제민주화 선봉장’ 최은열 의원이 일자리 대책으로 정부·사회지도층과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끄자는 제안에 눈길을 끌었다. 또 비정규직 급여 수준을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 정규직의 고용안정·비정규직의 높은 급여 중선 택할 수 있는 노동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야권이 대기업 노조의 이익에 반하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국가전략 사업이 무너질 위기였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예상됐다면 정부는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 미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그동안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한계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최대한 구조조정 속도를 늦췄다”며 정부의 안이했던 구조조정 속도를 비판한 뒤 “구조조정도 못하고 예산 낭비하는 국책금융기관에 ‘정피아·정피아·관피아·산피아·수피아’ 등 온갖 부정부패만 난무하고, 그 결과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야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에서 낮췄던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흐르게 한다면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경영진과 대기업 정규직,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저성장이 아닌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을 늘리고, 무엇보다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을 옥죄면 기업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더민주 ‘경제민주화 선봉장’ 최은열 의원이 일자리 대책으로 정부·사회지도층과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끄자는 제안에 눈길을 끌었다. 또 비정규직 급여 수준을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 정규직의 고용안정·비정규직의 높은 급여 중선 택할 수 있는 노동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야권이 대기업 노조의 이익에 반하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그동안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한계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최대한 구조조정 속도를 늦췄다”며 정부의 안이했던 구조조정 속도를 비판한 뒤 “구조조정도 못하고 예산 낭비하는 국책금융기관에 ‘정피아·정피아·관피아·산피아·수피아’ 등 온갖 부정부패만 난무하고, 그 결과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세균 의장 “사드 배치, 국회와 협의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회와 방미 성과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취임 100일 기자회견담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지금 부지 선정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사드 정도의 문제는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2016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 조율되지 않아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상황이 오면, 법인세는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여서 관련 법안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야권의 북한 수해 지원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에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안희정 “文, 한 집안 선배지만 경쟁은 숙명” 김부겸 “潘-安 단일화? 지지자 동의 의문”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같은 ‘친노(친노무현)진영’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의 대선 경쟁에 대해 “한 집안의 오랜 선배”라면서도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치인들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문 전 대표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동안은 예법에 따라 (문 전 대표에 대한) 말씀을 올렸던 것이라며 “임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대

중·노무현의 장자가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뛰어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승만 박정희의 근현대사도 뛰어넘고 20세기 정치와 결별하겠다”고 말했다.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는 “통합과 미래를 향한 지도자를 지역에 가두는 어법이라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종필 전 총리의 비애와 좌절의 역사를 극복하고 영호남 지역주의 뛰어넘어 대한민국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2일 일부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의 대선후보 단일화 시나리오가 주장에 대해 “안 전 대표에게 기대를 거는 분들이 동의할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야당 내에서는 아니지만,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가 탄생한 뒤에 꾸준히 그런 얘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정치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안 전 대표에게 기대를 걸고 한국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내에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는 “대선후보는 국민경선 방식으로 뽑기 때문에 지지층으로 구성된 당원들만으로 이뤄지는 리그하고는 다르다”며 “누가 후보가 됐을 때 표가 확장될지를 다 고민할 것이다. 평면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국감 브리핑

## “문화예술기금 부실 투자로 200억 손실”

### 국민의당 송기석

기초예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부실 투자로 200억여 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문예진흥기금의 여유자금 금융상품 투자원금은 총 1243억3000만원이지만, 실제 평가액은



1041억 2000만 원에 그쳤다. 결국 202억 1000만원(16.3%)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송 의원은 “200억여 원의 투자 손실로 심각한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